

데스크 시각

상상의 질서



홍 행 기
정치부장 겸 편집부국장

요즘 인문학이 대세다. 대학을 비롯한 기존의 정통 학계는 물론 기업과 지자체 혹은 백화점 등에서 개최하는 일반 문화 강좌에서조차 인문학 강의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인문학은 문학·역사·법학·철학 등을 포괄한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지루하고 딱딱한 ‘학문’이다. 남은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분야다. 그럼에도 요즘 사람들은 인문학 강의에 몰린다. 왜 일까?

인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시스템과 가치관을 만들어 내는 학문’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터다. ‘문학’은 신화와 전설 등을 창조해 내고 퍼뜨림으로써 부족과 민족을 통합하고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세계관과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 ‘역사’는 수많은 민족과 국가의 흥망 성쇠를 통해 지금의 사회를 더욱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한다. 또 ‘법학’은 사회가 원만하게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각 구성원의 행동을 규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갈망

그렇다면, 5~6년 전만 해도 이 따분한 학문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우리 사회가 갑작스레 인문학 분야에 ‘필이 꽃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특정 집단이 권력과 자본을 독점하고 일반 국민을 소외시켜 온 기존 사회 시스템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 그리고 불만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새로운 대안에 대한 관심을 불러왔고, 사람들은 ‘사회 시스템’을 다루는 인문학을 통해 대안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에 따르면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 같은 사회 시스템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상의 질서’(Imagined Orders)다. 그는 베스트셀러

‘사피엔스’(Sapiens)에서 “우리가 특정한 질서를 신뢰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상의 질서는 아주 많은 사람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설화하고 있다.

한국 인문학 부흥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최진석 교수는 “개인 또는 국가가 지닌 ‘시선의 높이’가 나라의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시선의 높이’란 바로 ‘생각의 높이’다. 최 교수는 “생각이 높은 수준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삶을 주제적으로 살피 위한 독립성을 확보할 때 가능해진다”라고 지적한다.

촛불 혁명과 ‘국민 주권’ 시대

최 교수의 주장처럼 개인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외부 세계와 자신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작업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존 질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 낸 상상의 질서일 뿐’이라는 유발 하라리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지난 대선을 전후해 한국의 사회 시스템은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 사회를 유지해 온 기존 시스템들이 급작스럽게 힘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다. 기존 시스템은 일부 특정 세력의 권력 독점 그리고 자본 독점을 양대 축으로 삼아 작동해 왔다. 하지만 인문학으로 단련된 국민은 기존 시스템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며, 사회 운영과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졌고, 1000만 국민의 손에 들려 어둠을 환하게 밝힌 촛불은 ‘국민 주권’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찾아냈다. 새 정부는 적폐 사정과 개혁 및 지방분권 등을 통해 새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유발 하라리는 “역사에는 방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역사는 통일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길게 보아서 역사는 통합을 지향한다는 의미다. 알아차렸든 아니든 우리 국민은 이미 새로운 시스템을 선택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어떤 미래로 이끌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지금은 옛 시스템과 새 시스템이 충돌하면서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물보라는 결국 사라질 테고 미래는 조만간 뚜렷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은편칼럼

품격에 관하여



고 성 혁
시인

품격이 있는 세상이 그림다. 언제부터였을까, 세상이 이리 흥흥해 진 것이.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에도 이처럼 사람들의 가슴이 갑갑하지는 않았는데 갈수록 언어의 쓰임새가 저급해져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하다. 물질은 보다 풍요로워 졌지만 반대로 정신은 더 피폐해지는 걸 보면 유물론이 왜 박대를 당하는지 이해가 간다. ‘품격’은 사전적으로 ‘사람 된 바탕과 타고 난 성품’을 말하거나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위’를 일컫는다. 이 품격이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 밟히고 있다. 하루가 멀게 터지는 사건 사고, 그중에서도 인면

수심의 폭력과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전도된 도덕적 타락 행위를 보면 언제까지 인간 세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산골 근처에서 개와 닭을 키우고 있다. 개는 결코 함부로 짓지 않는다. 자기 경계에 낯선 사람이 들어올 때만 짖을 뿐이다. 눈에 익은 동네 할머니나 집배원들에게는 그저 꼬리를 흔들고 바라본다. 닭은 어떤가. 암탉은 실룩한 부화를 만화하려는 듯 무려 45일 간이나 알을 품기도 하고, 수탉은 경이롭게도 신사적이다. 수탉으로서 다섯 마리 암탉을 철저히게 보호할 뿐 아니라, 먹고 있는 먹이일지라도 암탉이 원활 경우 선선히 양보한다. 물려다보면 그들은 본능 속에 나름의 품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어찌 많은 동물 중에 개와 닭뿐이라. 그럼에도 사람들은 개만도 못하다는니, 닭대가리라느니 하며 세상을 사람 중심으로 설명한다. 웃기는 일이다. 웃기는 일에 대해 더 얘기해보자. 정치는 도덕적으로 가장 으뜸이어야 한다. 정치로부터 파생된 법에 의해 우리는 삶을

규제받고, 정치인들의 행위에 의해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믿을만한 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우리 정치판이 가장 웃기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은 누가 선출했는가. 바로 우리 손으로 뽑았다. 누군가의 말대로 우리 손에 우리가 장을 지쳐야 할 일이지만, 그 누군가가 실행하지 못한 것처럼 손에 장을 지지는 일이란 쉽지 않으니, 최소한 우리의 제도에 대해 깊은 사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란 최종적으로 국가 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지만, 그보다 먼저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의 본질은 상대의 인정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롱과 모멸이리니. 요즘 TV 뉴스에서의 정치는 날마다 입을 빼죽 내밀고 ‘기다, 아니다.’의 극단을 보여주거나, 상대를 향한 비난만 있을 뿐이다. 정그린 이마와 내려 간 눈썹과, 비아냥대는 비틀린 입술과 입가에 낀 하얀 거품. 그 입으로 전하는 육두문자에 가까

운 망나니, 폐수, 시궁창, 아바위 그리고 영감탱이 같은 말들. 정말 고통을 준다. 상대를 저주하는 듯한 모양을 보면 저절로 혀를 찰 수밖에 없다. 이쯤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새구랄 것 없이 제발 품격을 지키라고. 세월은 가고 선거는 급방이다. 지금이야 기다릴 뿐이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분의 품위를 ‘스마트’하게 오래도록 기억한다. 더 이상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으니 제발 품위를 지켜주시라. 치절과 같은 이의 해악이 그림다. 풍자와 해학이야 말로 극단으로 몰리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방식이 아닐까. 신념은 부드러움으로 더욱 도드라진다. 누군가 ‘밤이 선행이다.’라고 말해 우리에게 울림을 준 바도 있지만 밤의 고평야 말로 역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원천이다.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 본인들 중에는 만나고 안고 닮고 싶은 사람도 많다. 먼저 말해야 하는데, 이런 나의 경솔이리니. 그래서 수탉이 내 곁을 그리도 서성였는지 모르겠다.

기 고

불확실한 광주 경제 극복할 미래 전략



김 영 진
지역미래연구원장

얼마 전 광주 경제의 미래 전략에 관한 몇몇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있었다. 가전산업이 빠져나갔고, 광주 미래 전략산업이던 광산업도 정체 상태라고 했다. 전장기업이 유지되기엔 광주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도 나왔다. 자동차산업이 중심 산업인데 기아차가 광주에 계속 있기도 어려운데 요세 친환경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생산 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혁신도시의 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벨리가 조성되고 에너지 신산업이 육성되는 것은 다행이라는 공감아 있었다. 그러나 광주·전남이 혁신도시 효과를 놓고

서로 분쟁만 커져 걱정이라는 한탄도 나왔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간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들과 사투 달랐다. 행정은 친환경 자동차 벨리와 전기 자동차, 4차 산업과 에너지 벨리 청사진을 연일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실 없는 장미빛 청사진이라는 비판에 누구 하나 아니라는 토론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런 비판이 일정 부분 사실이라는 것일까. 그러나 다른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렇다고 광주만 어려운 것이냐? 다른 도시도 한국 전체가 다 마찬가지 불황이다. 전기 자동차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광주는 그래도 전국에서 우수한 다음의 완성차 생산 기지로 가능성이 있다. 전장산업도 정부가 통 크게 밀면 안 될 것도 없다. 정체된 광산업도 의료 가전 에너지등과 연결하는 광센서 산업을 키우는 길이 있다.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효과는 매우 크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고 가는 방향을 잘 잡으면 된다는 긍정적 시각도 나왔다. 그렇다면 무엇이 현실이고 어떤 것이

미래 광주 경제의 방향이어야 할 것인가? 그 핵심은 정확한 지도를 그리자는 것이다. 무엇이 미래 성장 산업이고, 무엇이 쇠퇴하고 전망이 없는 산업이며, 어디다 힘을 쏟으면 미래 핵심 산업이 될 것인지를 정치적 구호나 허망한 분석이 아니라 제대로 정확히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거기에 어떤 산업이 육성되어야 광주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핵심이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행정이나 기관들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미래 예측보다 주어진 예산을 확보하기 쉬운 방식이나 기존 산업이나 업체들을 살리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한 지금의 급박한 현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 새로운 지역 균형과 지역 산업 육성을 시작하는 마당에 첫 그림부터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정확한 광주 산업 생태계 지도로부터 새로운 정책 목표와 실행 전략 설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태계 지도를 그렸다면 다음 순서는

시스템을 만들어 일을 제대로 착수해야 한다. 토론에서는 ‘광주시 미래전략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민간산학연이 머리를 맞대고 4차 산업 혁명 시기의 광주가 살 수 있는 미래 경제 전략을 기획하고 방향을 수립해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다. 묘하게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치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광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비전과 능력있는 리더십이아말로 광주 경제를 살리는 절점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시민들의 관심은 내년 지방선거로 모아지고 있다. 광주가 죽느냐 사느냐는 일대 전환기이기에 내년도 광주를 이끌 지도자는 역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기만 하다. 불확실한 광주의 미래, 이런 객관적인 산업 생태계 지도와 실사구시적인 미래 전략으로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할 미래 지도자와 미래전략위원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社 說

기초의원 5명 중 1명 행정 감시 ‘나 몰라라’

민선 6기 출범 후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구정(區政) 질문을 하지 않은 기초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지역 기초의회 의원들 가운데 5명 중 1명꼴이나 된다. 자치구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구의원들이 가장 기본적인 의정 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의당 광주시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5개 구의회 의원 65명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 3년간 112회의 구정 질문을 했다. 구의원 1명의 3년간 평균 질문 횟수는 1.7회에 그쳤다. 특히 임기 중 단 한 차례도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14명으로 21.5%에 달했다. 기초의회별로 살펴보면 동구의회와 광산구의회 및 서구의회에서 구정 질문을 전혀 하지 않은 의원들이 많았다. 동구의회는 지난 3년간 8명의 의원 중 단 한 명만이 4회를 기록했고 3명은 각 1회, 나머지 4명은 전혀 나서지 않았다.

전문 인력 고용 외면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

광주 지역 장애인 시설 상당수가 물리치료사나 언어치료사 혹은 간호사 등 필수 배치 종사자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광주시의 관리·감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수 의원은 광주 지역 23개 장애인 거주 시설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배치 기준을 모두 지킨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장애인 시설 가운데 중증·지적·지체 장애인들을 위해 물리치료를 고용해야 하는 곳은 3곳인데, 이들 모두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청각·언어·영유아 장애인을 위해 시당 1명씩 언어치료사가 필요하지만 6곳은 이를 무시했다. 또 장애인들의 영양을 위해 조리원을 최소 2명씩 배치해야 하지만 1명도 채용하지 않았거나 평소 건강 상태를 체크해 줄 간호사가 없는 시설도 태반

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어떠한 시정 권고나 구체적인 지도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 사회복지 시설 298개 가운데 57%인 171곳이 운영·회계·후원금·인권 등 각 분야에서 결격 처분을 받았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은 다른 기관이나 시설에 비해 운영자의 사명감과 봉사 정신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한 일부 시설들은 운영자의 기부와 회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행정 기관의 관리·감독은 느슨한 편이고 이를 틈타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도 장애인들의 돌봄·치료에 필수적인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 시설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더욱 필요하다. 아울러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및 영유아나 장애인의 언어 치료 등에 필요한 법적 인원 고용만큼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고려인’은 러시아를 비롯해 구 소련에 거주하면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민족 동포를 지칭하는 말이다. 고려인이란 용어가 언제 생겨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원은 없지만 대체로 1920년대로 추정된다. 일제 시대 국권을 빼앗기자 독립운동을 하거나 생존을 위해 조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대부분 국경선인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넌는데 이때 만주로 간 사람들을 조선족이라 하고 러시아 연해주로 떠난 사람들을 고려인이라 했다. 러시아 정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첫 고려인은 1864년 14가구 65명이 남우리스크 포시에트에 영구 거주를 목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이다. 이후 기근과 1910년 한일합방을 계기로 고려인들이 급증해 1914년 블라디보스토크에만 6만 3000여 명이 고려인 마을을 건설했다. 1926년 소련 최초의 인구조사에는 고려인이 8만6999명으로 기록됐지만 실제 거주 인원은 25만여 명이었다. 하지만 스탈린이 1937년 강제 이주 정책을 실시하면서 고려인 대다수가 터전을 잃고 6000km나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집단 이주하게 됐다. 고려인들은 중

를 구성해 광산구 월곡동에 30가구와 함께 정착하면서 고려인 마을이 조성됐다. 2013년 광주시의 고려인 주민 자유킨 조례 제정과 뜻있는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로 광주 고려인 마을은 국내 한민족 집성촌의 성공 모델이 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운운 화제다.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장관도 어제 광주 고려인 마을을 찾았다. 광주 고려인의 80%를 차지하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의 비자 발급과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방한에 분했지만 자국 출신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우즈베키스탄 장관의 행보가 감동을 준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